

● 부총리 신년사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 중점 추진' 시사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이제껏 우리는 지나치게 대학입학과 같은 학생들의 선발문제에 집착, 정작 교육의 본질인 ‘사람을 바르게 키우는 일’에는 깊은 관심을 쏟지 못했다”며 “창의적이며, 인간화된 2세를 바르게 교육하는 일부터, 국가대계를 위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본질에 천착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경쟁력의 제고와 아울러 교육의 사회통합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두 축,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튼튼하고 건실한 대중적 공교육의 기반 위에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엘리트 교육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우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 교육본질 회복에 역점을 두고 초·중등 교육 분야의 자율화와 분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안 부총리는 “대학들이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대학 체제를 특성화하도록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며 “대학재정지원 사업 역

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학간 경쟁을 통한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불합리한 대학서열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분야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인들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학점은행제와 원격대학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자율

다폭 낮춰

교육인적자원부는 새해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연 8.5%로 1% 포인트 낮추되, 정부가 4.5%를 지원하고, 학생은 4%의 이자만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학자금 융자의 40%를 맡았던 국민은행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정형편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

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2004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새해 9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융자한도액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종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에서만 대출해 주던 것도 등록금 납입고지서의 학생회비나 의료비까지 학생이 선택하여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융자규모는 7700억 원으로, 전체 재학생의 14%에 달하는 30만5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학생이며 각 대학 담당부서(학생/장학/복지과)에서 추천서를 받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은행은 농협중앙회와 한미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으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기납입자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으로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보증인이 없을 경우 학자금융자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졸업하고 7년간 균등분할상환이다.

### ● '학교기업' 설치 가능

3월부터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이 나면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대학은 특정 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교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 한약학과 6년제 추진

약학과에 이어 한약학과도 6년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제제의 발전과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약학과와 6년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

해 약사회는 찬성하는 반면 한의사협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19일 약사회, 약대교수 등이 참여하는 '약대 6년제 추진반' 1차 회의에서 한약학과를 6년제로 늘리자는 안이 제시되자 이를 수용키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학제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는 한편 한약학과 교수협의회가 6년제 커리큘럼을 제출하면 약사회·한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6년제 전환은 약학대가 6년제가 되는 2006년에 맞추거나 1~2년 늦어질 수도 있다. 현재 한약학과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에 개설되어 있다.

### ● 교육대-사범대 통합 추진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를 통합, 종합교원대학을 설립하고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입학정원이 적은 3~4개 교육대와 사범대를 우선적으로 통합하여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초등교원은 부족하고 중등교원은 남아도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머지 대학도 통합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교원자격제도가 유아·초·중등 및 특수학교로 구분되어 있고 교사양성기관도 분리되어 있어 학교급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에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교원자격기준 강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교육대와 사범대간 학점 교류 활성화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 지방대 특성화 올해 2200억 지원

지방대 특성화 프로그램에 올해 2200억 원,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억 원 등 5년간 1조4200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까지 각 대학에서 특성화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6월부터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4년제 및 전문대학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소 등과 함께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발전 전략에

맞춘 인력양성 사업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0~9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시설보수비, 장학금 등 매년 10억~50억 원을 5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인적자원개발회의, 이공계 대학연구소 집중 지원**

정부는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소 100곳을 선정, 2008년까지 연구소당 연간 5억~10억 원씩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23개 기능대학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산업수요와 노동시장 변화에 맞출 수 있도록 3년제를 허용하고 수시입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올해 첫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학 부설 이공계 연구소 1310개 중 기초·원천·공공·미래·지역특화 분야를 위주로 우수 연구소 100개 가량을 골라 2008년까지 5년간 해마다 5억~1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올해 10~15개 연구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 산하 기능대학 중 항

공·섬유패션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부 직종 학과에는 3년제를 도입하고 수시입학제(9월 입학) 및 쿼터학기제를 허용하는 등 산업수요 및 노동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 **기술대학 설립 요건 완화**

산업체 근로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학의 설립이 쉬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술대학 설립·운영 요건 가운데 산업체의 재산출연 의무부담비율을 현재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5%에서 3.5%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이 대학 설립·운영자와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설립할 경우 소요 재원의 절반 이상만 부담하면 되고, 은행의 저금리 기조 등에 맞춰 더 낮은 수익률을 내도 되기 때문에 기술대학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술대학 설립심사평가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기술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맡도

록 했다.

● **병역면제 대학연구요원 지방대출신 30% 할당**

교육인적자원부는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대학 연구기관에서 4년간 일하면 군복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지역할당제를 도입, 지방대 출신의 비율을 30%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60명인 올해 선발예정 인원 가운데 기초의학 분야 10명을 뺀 105명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채워진다.

그 동안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한 전문요원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의 합격자는 2000년 18.6%, 2001년 20.7%, 2002년 15.9%, 2003년 16.7% 등으로 해마다 20% 안팎에 그쳤다. 한석수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장은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32명(기초의학 10명 포함)을 선발하는 전기시험은 2월, 나머지 28명을 뽑는 후기시험은 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다.

● **이공계 대학원생도 등록금 지원... 이르면 내년 5000명 혜택**

앞으로 기업들이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 수의 과학기술 전공자를 채용하면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또 이르면 2005년부터 주요 이공계 대학원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품목·기술별로 5개 전공과정이 신설되고, 연간 이공계 대학원생 5000명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오명 과학기술부, 이희범 산업자원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함께 '경제계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민·관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혁신 지원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과학기술 전공자의 채용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미리 채용목표를 정해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3000여 명의 채용을 지

원키로 하고 해당 중소기업에는 6개월 동안 1인당 월 6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도 올해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270명 고용 지원에 65억 원을 투입, 기업당 1~2명에게 최장 3년 동안 석사급 연 2200만 원, 박사급 2800만 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우수한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해 연간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50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을 내주기로 했다.

3개 부처는 이와 함께 지난해 확정된 10대 신성장 동력의 연구개발(R&D)에 모두 1조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 연구인력 1만 명을 양성키로 하였다.

● **이공계 선발 대학 자율 건의**

2008학년도부터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수험생들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수학, 과학 시험만 치고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런 내용의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들은 2008학년도부터 수능과 상관없이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 사실상 전면적인 자율권을 부여받는 것

이다. 구체적 시험 방법은 논술과 심층면접, 실기전형 등이다. 국·영·수 과목 등의 지필고사 형식의 본고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는 현재처럼 학생들을 선발한다.

자문회의는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늘리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외의 일정 수를 여학생으로 선발하면 정부가 장학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2008년까지 과학고 네 곳을 추가로 만들고 2005년부터 기존의 과학고 정원도 늘려 1900백여 명을 더 뽑는 방안도 나왔다. 자문회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공계 학장, 교사, 관련 학회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안을 만들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본고사 형식의 지필고사만 아니면 수능 없이 이공계생을 뽑는 것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대학들에 선발 자율권을 주는 것은 본고사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30~40개 학교기업 선정해 100억 지원 계획**

올해부터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공장, 제빵회사, 디자인용역회사

등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는 학교기업을 설립하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와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에 교육과정과 연계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학교기업 30~40곳을 선정해 총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기업 지원은 소매업, 주점업, 마사지업 등 학교기업으로서 부적절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사업 규모별로 2억~5억 원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 한 후 3월 중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기업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년 3월부터 학교기업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현장 실습도 가능하고 수익이 나면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성과급도 줄 수 있다. 또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때에는 학과와 전공, 담당 교직원, 시설과 기자재 및 설비 운용 방법, 학교기업의 위치, 재정 투자 계획 등을 명시하고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5급 고시 합격자 20% 의무적 지방대 출신자에 할당**

정부는 이르면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고시 합격자의 20%를 의무적으로 ‘지방대 출신자들에게 할당하는 지방대 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방출신 공직임용확대방안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행시와 외시 등 5급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20%가 되도록 지방대 출신을 추가합격시키기로 했다. 2004년의 경우 5급고시의 합격률은 서울지역 대학출신이 85.6%, 지방대 출신은 14.4%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극심한 지방대 취업난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취업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지방대 출신의 지역인재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

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직적격성시험(PSAT)을 치른 뒤 인턴 형식으로 취직하며, 계약기간이 지난 후 직무평가 및 심층면접을 통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다. 추천채용제는 서울을 포함, 지역별로 1~2명을 뽑는 등 30명 정도를 우선 채용하고 해마다 확대 시행키로 했다.

● **국립사대 미임용자 구제**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지난 14년 동안 교단에 서지 못한 ‘국립사대 미임용자’들이 특별법에 의해 교원임용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이 특별법을 거부하는 데다 이번에는 교육대생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월 11일부터 오는 7월까지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미임용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국립 사범대를 졸업해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1990년 10월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실제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번에 등록하면 2005 교육대에 편입되어 2년 동안 연수를 받은 뒤 초등교원으로 임용되거나,

내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전공 변경 연수를 받은 뒤 중등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초등교원에 임용되면 2년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농어촌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임용자가 7101명이며, 이 가운데 2000~3000명이 아직 교사의 꿈을 버리지 않아 이번에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지난 14년 동안 주장한 것은 임용 시험 없는 중등교원 특별임용”이라며 법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문영미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 위원장은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보라는 것은 법에 따라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고, 중등교원인 우리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겠다는 것 역시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해 사범대생들이 반발하자 갑자기 초등교원 임용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학하자마자 교육대생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발추는 이에 따라 등록은 일괄적으로 하되 편입·연수 등은 거부한 채 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

앞으로 수업연한을 채우고 대학 ‘5학년’을 다니며 모자라는 일부 학점을 수강할 경우 듣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또 미리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학기 개시 전 휴학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9일 확정·공포하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면 된다. 또 대학원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낸다. 이는 몇 학점이 모자라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기를 시작하기 전 휴학하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 ●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 3월 시행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이 3월부터 실시된다.

과학기술부는 신진연구자연수 지원사업은 3월 10일까지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은 3월 12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신청 및 접수된다고 밝혔다.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은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들에게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현장에서 연구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연수연구원으로 선정되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월 석사는 120만 원, 박사는 150만 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되며, 금년에는 36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연구원에 대해 연간 석사 22백만 원, 박사 280백만 원을 지급하되, 올해는 정부에서 인건비의 70%, 채용기관에서 30%를 부담하게 된다. 금년에 3백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다.